

2021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정책포럼 vol.1

-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자율성과 법제도 -

- ◆ 일 시 : 2021년 6월 1일 (화) 14:00 ~ 16:30
- ◆ 장 소 : 시민청 바스락홀
- ◆ 주 최 :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 ◆ 참 석 : - 허정숙(전지연 회장,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 정명근(전지연 기획정책실장)
 - 조덕희(전지연 사무국장)
 - 이동훈(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 김시범(국립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지역문화학회 회장)
 - 정윤수(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 장현선(장애파트너스 그룹 대표)
 -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이사진
- ◆ 발 제 : ○ 발 제 / 이동훈(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 『상향식 사업구조로의 변화를 위한 입법정책 전략』
- 모더레이터 / 김시범
- ◆ 1 섹션 : ○ 지정토론 1 / 정윤수
 -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위한 두 번째 단추!』
- 지정토론 2 / 장현선
 - 『상향식 사업구조의 의미와 출발점
 - 지역 예술인과 지역민의 의견 수렴 방법과 적용』
- ◆ 2 섹션 : ○ 자유토론
 -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자율성과 법제도』
 - 토론패널 / 전지연 이사진
- ◆ 종 합 : ○ 질의응답 및 발표 Summary
 - 토론패널 / 전지연 이사진

- 결론과 제안 -

-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강화 및 지역문화 정책사업의 원활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관련 기관과 단체, 시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방식이 법제도화 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
 - 다만, 법률 개정은 중장기적인 과제에 해당되므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무운용의 변화를 모색하거나 자율성 강화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별 규정들을 찾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하반기 정책토론 vol. 2를 “지역문화진흥법 및 출자출연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칭)”로 관련 의원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협·단체의 참석을 추동하자.
 - 연합회 중장기 발전 계획과 지속가능한 변화 모색을 위해 이사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이해관계자(대내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연구와 모색하자.
 - (제안)민법상 비영리 공익재단(사단법인, 재단법인), 출자출연재단, 지역문화활성화법 등 법률적 조력을 위해 비영리공익법 지원하는 법무법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자.
 - (제안)정책포럼에서 나온 의제 논의를 위해 전지연 이사회, 운영위원회 논의를 수렴하여 정책TF구성을 추진하자.
- 지역문화예술 실태조사, 전지연 역량강화 플랫폼 콘텐츠를 모으고 확대 구성하자.
- 지역문화재단과 전지연의 역량강화에 노력하자.

- 지정토론 요약 -

- 지정토론 1 :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위한 두 번째 단추!」

○ 정윤수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군수님이나 구청장님 등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다. 그에 따라서, 세 번째죠, 지역 문화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다.’라는 것이 아마 상향식으로 앞으로 개선을 전제로 하고 발제한 것으로 안다.

상위법상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그 아래 기초자치단체장의 장이 되시는 분들이 의견을 내려면 그분들의 정치적 소견이나 개인적 취향을 내는 게 아니므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전 단위에서 어떤 의견수렴의 장이 필요하겠는가? 이것은 더함의 연구과제에도 속해 있기도 합니다만, 아마 오늘 토론자로 많이 참석해 주신 지역의 이사님들께서 그 것이 충분히 무르녹아 있어서 이것을 반영하고 대표하여 기관의 장이 의견을 내는 것인데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주체인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한다, 시민이 누구인가? 주체가 누구인가?’ 문화 향유의 주체인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이라는 이 명제적이고 선언적인 표현이 훨씬 더 섬세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 생태계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상은 그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고 작업도 하시면서 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의견을 하나의 예술가의 돌발적이거나 즉흥적인 창작 욕구나 표현 욕구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섬세하게 삶을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어떤 긍정적인 문제의식이라든지 사업제안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충분히 존중하여 이해한다면 시민 주도라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와 문화예술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그 기획자와 실천자, 예술가들이 아주 튼튼한 실천력과 건강한 상상력을 기초재단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상향식의 튼튼한

어떤 베이스나 생태계를 구성할 것 같다.

정말 문화예술가들의 지지에 기반하여 각 문화재단이 진정한 자율성을 획득하지 않으면, 그런 면에서 앞으로 각 기초지자체의 정책적인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단 구성원들에 대한 인구 구성적인 연구도 필요할 테고요,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면 하향식이 아니라, 수직계열화가 아니라 재단이나 예술가나 모든 사람을 용역 외주의 끝단에 서도록 하는 현재의 수직계열화가 아니라 상향식으로 하려면 더함에서 치밀하게 보고해 주신 그 스텝 바이 스텝을 밟는 것과 동시에 기초문화재단 분들이 그 지역이 예술가들과 수평적인 연대를 하고 있느냐가 저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크지 않은 예산이고 사실 소박하게 정겹게 하는 사업인데 이거 하다가 진이 다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행정 서식을 맞추다가 일할 시간이 없는 것이 우리 스스로 지역문화인들에게, 지역예술가들에게 하는 것은 없는가? 그런 것을 막 개선해 나가면서 그럴 때 지역예술가들의 아주 빛나는 상상력과 지역기획자들의 날카로운 어떤 기획력들이 '그래, 같이 하자' 해서 결합해서 이 힘으로 상향식 사업의 어떤 근거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린다.

- 지정토론 2 : 「상향식 사업구조의 의미와 출발점

- 지역 예술인과 지역민의 의견수렴 방법과 적용-

○ 장현선 (장애파트너스 그룹 대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1기 계획이 발표됐는데 그 1기 계획 자체가 오늘 계속 지적되고 있는 지역문화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이 왜 상위에서 먼저 수립하고 지역에 내리는 형태일까? 이것은 누구나 가지는 의문점일 것 같고 지역문화진흥법에도 당연히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다.

문체부에서 진행하셨던 1차 계획의 평가라든지 기획단을 구성해서 하는 거라든지 지역토론회를 쉽게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들 작년, 재작년 기억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문화기획자들이 스스로 만나서 400명이 지역을 돌면서 했던 자체적인 활동들도 다들 아실 것이다. 2기 계획에도 보면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

17개 시도의 이행사항 점검해야 하고 토론회 공유 다 해야 한다고 의견수렴의 일종의 방식까지도 사실상은 제시했다.

그런데 여전히 훑어봐도 먼저 지역에서 기초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광역에서 조율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상위 단에서는 지원방안을 수립하라는 계획은 이 안에도 없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동일하지만 방법에 대해서 아직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문체부도 방향성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나간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고요.

상향식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상위에서, 그러니까 문체부나 문화정책 전체를 담당하는 쪽에서 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지역으로, 기초단위로 내렸다고 했을 때 기초단위의 한두 명이 모여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위로 올리면 이것이 상향식은 아닙니다. 상향식 계획수립이라는 것 자체는 지역에서 실제로 문화적 삶의 대상이 되거나, 문화적 삶을 스스로 누려야 하는 지역민 그리고 함께해야 하는 예술가, 유관기관 그리고 이런 공동체적인 이슈를 같이 논의하는 시민단체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향식이라고 했을 때 맨 밑에 있는 계획 그 이전에 누구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누구와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서 같이 법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기회가 왔을 때 오히려 기회가 독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문화예술 관련 기초자료들이 상향식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에서 중요하다.

지역 기초단위가 이런 지역의 정책들을 지금 수립할 수 있는 준비와 자원이 있느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준비해보면 좋겠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 관련 기초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예술과들과 지역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수요가 무엇이나,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근거로 가지고 있느냐? 많이 안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시작하고 있다.

기초문화재단은 지역사회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하고 굉장히 접점을 많이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기초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일 수도 있는 거죠.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서 지역문화재단이 같이 고민해 줘야 하고 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도 이런 형태로 지역사회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쪽에서 같이 고민하고 협력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 또한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어떤 방향성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

- 자유토론 요약 -

○ 김희정 (춘천문화재단 사무처장)

상향식, 바텀업 방식이 실현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지역에서의 지역문화재단의 위상과 역량에 있다.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의 핵심은 재원의 독립성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의 독립성이다. 인사권이라든가 채용 등에 관련된 **출자·출연기관**의 행정지침 같은 것이 재단의 행정에의 종속성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행정과 재단간에 정책협력 파트너로서의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

○ 어연선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총액예산제 등 다른 법령 제도화 방안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재단의 관계가 사실 자율성에서는 가장 커다란 문제이며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 양재호 (은평문화재단 대표이사)

은평문화재단은 기초문화재단 중에서 유일하게 문화정책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곳. **지역 기초자치구에 대한 문화 생태계 그리고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이 재단의 독립성과 바

로 연결된다.

○ 김정숙 (담양군문화재단 사무국장)

올해 저희 재단이 문화도시추진단을 만들어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2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의 주민들과 거점 공간의 문화예술인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지역의 현안을 마주하게 됐다. 이러한 현안들을 고민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문화사업들이 무엇인지 새롭게 하나하나 발굴해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고유의 사업과 정책으로 수립해 가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이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러다 보니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내려오는 하향식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도 인력이나 예산이 굉장히 벅차다. 이러한 식으로 대다수 기초 재단들이 하향식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만 길들여온 것은 아닌가 싶다.

아무리 지역의 주민들,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현안들을 보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정책들을 고민한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정책이나 사업으로 결실을 보기에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독립성,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고민의 출발선에 함께 서서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면서 전지연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의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한다.**

○ 김용현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도봉 문화도시사무국에는 문화도시추진단이라고 하는 68명의 주민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과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고 만드는 것을 상향식으로 올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서울 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자치구문화재단이 서울시에 22개의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의 정책팀장 혹은 사업팀장들을 모아서 총 22명의 정책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단 대표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팀장들이 모여서 전반적인 방향이라든가 우리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월 수시로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 서강석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지역문화의 자율성의 핵심 요체는 사실 인사, 재정, 정책 결정이다.

재정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국세가 2019년도 기준 76.5%이다. 압도적으로 국세가 많다. 그런데 공공재단의 재원의 대부분은 시 출연금이라든가 나머지는 전부 다 공모라든가 보조금 사업들이다. 그래서 줄 세우기라든가 아래도급 계열화된 이런 경향이 많다.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의 일정 부분을 포괄적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고 판단된다.

현재 실행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 **먼저 지역에서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광역에서 만들고 그러면 이것을 중앙으로 만들고, 만약 포괄적 중앙정부 예산이 지방으로 간다면 이것 자체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사업방식이 상향식이나, 동의, 비동의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저는 수직과 수평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윤정국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상향식 사업으로 전환하면 과연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담보되는가? 어렵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물론 법제상에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지역에서 중요한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이런 논의 자체가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역문화재단은 항상 예산과 인력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보조금 사업을 유치하는 압박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또한 중앙정부의 줄 세우기 경제구조 속에서 지역문화재단들의 사업이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시·군·구 단위에서 재단 임직원들이 갖는 갑 의식, 관리하려고 드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인력과 예산을 통제하는 수단들 이런 것들이 재단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다. 재단 임직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런 지방정부들의 심리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경영평가지표에 자율성과 안정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서 지역문화재단들의 어떤 운영 방향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 배윤수 (양구문화재단 사무국장)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와 함께 각 재단의 설치·운영조례나 정관들에 독립성과 자율성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다. 사실 모든 법과 제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위계로 인해서 사실(광역·기초문화재단)은 압력을 받고 있다.

(각 운영조례들에는)독소조항과 (불합리한)요소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전지연에서 자리를 마련해주셨기 때문에 발제자 여러분께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행안부의 출자·출연 부분의 운영조례 내지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해 계속 반복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각 재단의 정관에 대한 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대표이사님들이나 아니면 재단에는 법리적인 자문기구들이 다 있을 것이다. 여기서 조언을 받아서라도 여기에 대한 바로 잡힘이 있어야 한다.

말 그대로 전문기구 안에 있는 인력들은 일단 문화기획이라는 것 그리고 문화사업이 좋아서 본인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들어온 인적 구성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역의 현안 사항들을 다루자는 얘기도 많이 나왔듯이 이런 내용에 대한 살펴봄, 눈여겨 봄들을 대표이사님들이 독려해 주시고 기관장 여러분께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 독소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는 제안한다. 위계가 아닌 정말 수평적인 평등의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가 합리적으로 마련돼서 정말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역문화재단이 되어야만 지역의 현안사항, 문화도시사업들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

○ 허정숙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지역문화재단이 이제 설립되어 가는 과정이나 하나의 직군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예를 들면 다른 직군들은 거의 다 공동의 급여테이블이 있고, 복지라든가 자격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지역문화재단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은 높으나 그 어느 것 하나 집단화되어 있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연대하여 함께, 이제 재단들이 사실 100여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

지금의 **탐다운 방식의 공모방식 중에서 일부를 목적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제안한다.**

김시범 교수가 제안한 TF 구성 제안에 동의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른 거 할 말도 많고 같이 공동의 인식을 가지지만 또 하나는 생활문화에 대한 건데요, 토론에서 제안하신 것은 하나의 생활구역 이렇게 해서 공모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저는 **생활문화가 과연 사업인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향유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잘 놓고 계시다. 인터넷 안에서는 또 각자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창의적인 예술인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과연 하나의 사업인가? **국민의 문화기본권으로 접근하면 안 될까?** 생활문화 하면 누구의 사업, 누구의 어떤 프로젝트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면 좋겠다. **국민의 삶 속에서 지금 그냥 우리가 부정해도 존재하는 생활 속의 문화들을 어떻게 그러면 공공이 보장할 것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제도화해서 보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안드린다.

두 가지 토론 내에서는 다른 분들이 안 하신 말씀 중에 드리고 싶었다. **오늘 제안하시고 토론하시면서 제안한 것들을 차례로 해서 전지연에서도 이사님들과 각 재단과 협의해서 함께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해가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 마무리 발언 요약 -

○ 장현선 (장애파트너스 그룹 대표)

정책이라는 단어에 너무 갇힐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설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사업부서와 그런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정책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 현장에서 쓰시는 것으로 해석해서 차분히 몇 명의 활동가들 또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당사자 연구를 해도 좋다. 서울연구원의 작은 연구라든지 50플러스재단의 당사자연구라든지 이런 사례들도 많다. 다양한 방식을 활용면 좋을 것이다.

○ 정윤수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개별 지자체마다 정책의 기능은 또 고유하게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요구에 따라서도 다르고 농어촌이 베이스냐, 도심 베이스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 재단과 그 지역의 삼투압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책실이면 더 좋다.

자격증 제도를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들었는데 이게 낙하산을 방지한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의미도 있을 것 같다.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모든 사람이 시험을 보거나 자격증에 의해서 그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은 생성 배경이나 문화의 속성상 그것을 강제하거나 특별히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자격증 내지는 자격제도를 한번 상상할 수는 있겠다.

자율성과 법제도는 상향식으로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확인한 것 같다.

재단이 한 사업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인데 지표 개선이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본다.

○ 서강석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현재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법상으로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는데 이게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게 과연 현실

에 맞는 건지,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 이후 중앙정부에서부터 다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 법 개정 문제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 김시범 (국립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또 한 번의 포럼이 필요하다.

상향식 사업방식이라는 것의 개념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할지는 모르나 그게 지금 당장 우리의 자율성이나 안정성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여러 제반 여건들이 선행돼서 해결되어야만 상향식 사업방식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문화도시의 사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존의 사업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했지만 그게 진정한 상향식 방식이냐에 대한 것도 또 하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지자체나 이런 행정부처에서는 그것은 그쪽의 영역인데 기초지역문화재단에서 정책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오해 내지는 불편함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기획이나 전략 이런 어떻게 보면 내용은 같을지 모르나 행정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발전방향이라든지 중장기적인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 접근하면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는 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인력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한편으로 또 몇 군데는 그런 것을 전담하는 인력을 충원도 했고 서울 같은 경우는 모여서 같이 논의하는 장은 지금 시작됐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차출한다고 하는, 파견한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정윤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을 하면서도 어떤 TF의 한 구성원으로서 꼭 이사진의 재단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모여서 정보 공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연구도 조금 해나가면서 전략기획을 하는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은 가능할 것 같다.

특히 급여표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경영평가의 평가지표 이런 것은 특정 기초문화재단이 한다고 했으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표를 왜 얘기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공동이 만들어서 지역의 생활질서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서, 출장비도 보면 A 지역, B 지역 해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공동이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이 속해 있는 지자체에 이렇게 제시하면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경평 같은 경우도 본인도 중앙부처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항상 그쪽에서 거꾸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그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평가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우리의 특성을 이해 못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맞는 것을 좀 가지고 와봐라. 너희에게 맞는 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조금 변형하든 그 기준에 할 텐데 왜 너희는 안 가지고 오고 맨날 잘못 평가한다고 불만만 내세우느냐?'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런데 그것을 특정 기초문화재단에 할 수는 없다. 이것은 같이 해야 한다.

자격증도 옛날에 저작권관리사라는 자격증 제도를 했었다. 우리나라 저작권위원회에서 그거 못 했다. 왜? 변호사님들이 항의해서. 이게 영역싸움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그냥 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국가공인이 아니라 민간공인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108개지만 기초지자체가 전체가 생기면 일자리는 더 많이 만들어질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평가라든지 급여산정이 굉장히 투명하고 객관화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을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TF가 구성돼서 '자, 그러면 올해는 우리 자격증 제도를 가지고 하는 팀 하나, 급여표를 연구해보는 팀 하나 이렇게 한 2개의 팀이 구성돼서 한번 그런 것을 다른 사례를 조사하고 만들어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정리되면 그것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전지연이 채택하면 그게 이른바 문화재단에 근무하고자 하는 친구들한테는 시험을 볼 수 있고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공부해야 하니까 이런 법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이런 효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것 중에 어떤 것은 당장은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게 선행돼야 할지, 어떤 게 중장기로 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 같다.

○ 이동훈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전국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확대 등은 독소조항의 제거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 더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상향식 제도로의 전환은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와 자치분권과 더 상위의 넓은 개념의 어떤 변화와 수반되어가는 흐름인지, 특정 이슈만으로 다루기에 어려운 이슈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법은 껍데기, 포장지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포장지 내에 어떤 물건이 있느냐는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게 중요하다. 정책 기능이 강화돼야 하고 기초 데이터가 확보돼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가 풍성해졌을 때 그것을 어떤 포장지로 덧씌울 것이냐를 고민하는 단계가 법적인 측면이다.

실제로 상향식 전환 논의는 지역문화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상향식으로의 행정계획수립 등에 관한 얘기는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느린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가들은 그 콘텐츠를 모르고 법을 만들기도 하고 해외 법제도 등을 피상적으로만 살펴 입법 역시 피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작동이 안 되게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상향식으로의 변화 이런 것은 해외에서도 사실 10년, 20년 지속해서 해보니까 이런 제도가 정착된 것이지, 어느 한순간 누가 머릿속으로 딱 '이거 바꾸자' 이래서 1, 2년 만에 바뀐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의 논의가 결국에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후배들에게 아마 본보기가 되는 논의가 될 수 있다면 대단히 유의미한 자리가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공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협력이 실제 가능하게 전문성의 토양을 쌓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중의 한 분야로서 **법제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적인 자율성의 제약, 재정적인 자율성의 제약, 사업 내지는 정책 결정사항에서 자율성의 제약** 이 문제가 되게 다르게 보이는데, 예컨대 법 구조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재정규율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했느냐를 중심으로 규율체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독소조항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실무운용체계들을 바꿔나가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전지연이 정말 계속 기여를 많이 해주시기를 응원한다.

○ 허정숙 (전지연 회장,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상향식을 바라는 것은 오늘이 처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십 년 동안 바라는 일이지 않나 싶은데 너무 허무하게 아직도 멀고 아직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가 뭔가 한 발 나아가서 이런 영역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오늘 도출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향식이라는 것이 무조건, 베스트는 사실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주 좋은 용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사실 역행하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한 것들을 일할 때 가지는 만족감은 훨씬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준비가 안 돼서 베스트를 내지는 못하지만 내가 여기서 일원으로서 그냥 시키는 것을 하는 부품이 아니고 나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일하는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상향식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이 거꾸로 또 전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름답고 멋진 용어들은 어딘가에서 누군가 또 훌륭한 분이, 교수님이 또 만들어 내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와서 정말 지역문화 전문가로서의 우리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고, 저희가 바라는 지금 정치적 한계 속에서의 상향식이 한계는 있으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언어로 이야기할 기회를 만드는 상향식의 과정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것에서 아까 같이 지역에서 모델들이 있다면 좋은, 선행하는 다양한 지역의 실험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전지연이 함께 공유하고 퍼뜨리고 따라 배우고 하는 과정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정책에서의 문제들은 정책위원들은 전지연에 운영위원 제도가 있고 25명 정도의 운영위원이 있다. 그중에 정책분야의 분도 계시고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별도로 할지 아니면 추가로 조금 더 다른 분을 모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과 상의해서 운영위원들이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전지연이 아직은 조직적 한계가 있다. 회장인 본인도 비상임이고 우리 사무국 직원도 몇 몇 안 되는데 우리는 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아직 허무하지 않은 작은 노력의 뭔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함께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